

大學教育의 秀越性 追求

姜 武 燮
(KEDI 教育計劃研究室長)

1985년 3월 대통령 직속의 한시 기구로 발족한 教育改革審議會는 작년 말로 교육개혁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임무를 종결하였다. 이 글은 교육개혁심의회가 최종 보고서로 중점 개혁 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 방안을 제시한 '10大 教育改革'의 하나인 '대학 교육의 수월성 추구'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1. 序 言

대학은 敎育·研究 및 奉仕의 3대 기능을 통하여 개인의 자아 실현과 국가·사회 발전 및 인류 사회의 공영에 이바지한다. 향후 우리 사회는 고도의 기술·정보를 制禦하는 社會, 開放·國際化된 社會, 그리고 생활 양식과 사고가 다원·다양화되는 사회로 발전할 것이 전망되고 있어 대학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은 지금까지 양적 성장에 주력한 나머지 대학에게 기대되는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조화롭고 수준 높게 수행하지 못하였다. 즉 대학교육의 質的인 水準이 未洽하고 研究活動이 부진하며, 봉사 기능이 사회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대학은 量的인 膨脹을 지양하고 質的인 向上을 도모하여 敎育·研究의 秀越性을 구현함으로써 국가·

사회 및 인류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

대학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의 敎育·研究 與件을 改善·擴充하고 支援體制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의 부진한 연구 활동을 活性化시키기 위하여 전임 교수의 수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연구 시설의 확보와 연구비 확충 등을 통해 研究 與件을 대폭 改善해야 한다.

대학들이 외부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인 질적 통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위의 公信用을 提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 학위과정의 공인 여부를 결정하고 대학 운영의 충실도를 평가함으로써 개별 대학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大學教育의 수월성은 대학 체제의 다양한 발전을 통하여 추구되어야 한다. 모든 대학들이 성격과 기능에 있어서 유사한 유형으로만 발전하

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개혁하여 대학간의 機能을 分化하고 독자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지향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성 속에서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

개방·국제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大學教育의 국제 경쟁력을 신장해야 한다. 특히 대학의 特性化를 통한 국제 경쟁력 신장을 유도하고 대학의 地域研究를 活性化해야 한다.

2. 大學의 機能分化 및 特性化

대학의 機能分化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대학교육이 추구하여야 할 價値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에 중점이 있다 할 것이다. 대학교육의 기능 분화는 관점에 따라서 多樣性을 效率的으로 추구하기 위한 方便이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多樣性 속에 秀越性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오늘날 고등교육은 산업 사회에서의 人力需要, 문화적 변천에 대응한 지식 창출, 성취 등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 기회의 부여 등 다양하고 방대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획일화된 大學體制에서 이러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은 어렵다. 또한 대학은 학교 제도로서뿐만 아니라 單位教育機關으로서도 독특한 個性을 살려 가면서 고유의 영역을 개발·담당해 나가야 하나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체로 비슷한 유형으로 발전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高等教育機關의 機能이 수직적·수평적으로 未分化되어 있다. 垂直的으로는 전문대학과 대학,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간의 機能의 重複과 模倣 現象이 일어나고 있으며, 水平的으로는 個個의 고등교육기관에 獨自性과 特殊性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이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垂直的·水平的인 기능 분화와 특성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한정된 資源 活用의 效率性과 고등교육의 外적 生産性의 向上을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문대학은 직업 및 교양을 위한 고등교육 단계의 繼續教育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다양화해야 하며,

4년제 대학은 독자적이고 특색 있는 교종과 학문적 수월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제로의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문대학은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類型을 二元化하여 육성하도록 한다. 산업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中堅職業人 養成에 역점을 두는 농업, 공업, 디자인, 상경, 수·해양, 간호·보건계, 정보산업 분야 등의 전문대학은 직업교육 중심의 單設型 專門大學으로 특성화하여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中堅職業人 養成과 教養教育의 양쪽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형태의 계속교육을 실시하는 데 목적을 둔 분야 등의 전문대학은 그 지역의 綜合型 專門大學으로 육성해야 한다.

둘째, 4년제 대학은 각 대학이 표방하고 있는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大學은 教授 機能에 중점을 두는 대학과 研究 機能에 중점을 두는 대학 그리고 학문 연구에 중점을 두는 學問指向 大學과 전문 직업인 양성에 중점을 두는 전문 직업 지향 대학으로 특색 있게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대학은 대학원과 연계하여 대학원이 없는 학부 중심 대학, 대학원 병설 대학 그리고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유형화하여 육성하되 학부 과정이 없는 單設 大學院의 설치도 허용해야 한다.

세째, 모든 대학들이 특색 있는 대학으로 발전하도록 대학을 특성화한다. 대학의 教育 條件과 教授 確保 狀況 및 教育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우위 분야를 선정하여 특성화하고 이러한 비교 우위 분야 관련 연구소도 특성화하여 중점적으로 支援·育成해야 한다. 특히 특색 있는 대학으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규모의 팽창 경쟁을 조장하는 종합대학교과단과대학의 구분을 지양해야 한다.

네째, 國立大學과 私立大學間의 역할을 분담함과 동시에 國立大學間 또는 私立大學間에도 특색 있게 발전하도록 지원·조성한다. 예컨대 국립대학은 국가 수준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분야와 대규모 投資가 소요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되, 국립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점 육성 분야를 달리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여 大學體制를 개편하고 機能을 調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대학 사회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우려되므로 정부에서는 支援과 助成을 통한 誘引體制를 마련하여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機能을 분화하고 특성화를 추진하도록 誘導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대학간 자율 협의의 기구가 자율적인 통제와 조정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학의 체제 개편이나 기능 분화는 물론 특성화 등을 단위 대학별로 획일적으로 추진할 경우 동일 대학내에서 갈등과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동일 대학내에서도 다양한 유형으로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 및 학과별 기능 분화와 특성화 전략을 허용해야 한다.

3. 大學院中心大學의 選別 育成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研究 興件이 不備하여 대학원 교육이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교수들이 과중한 강의 및 學生指導 負擔으로 연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우며, 研究 支援을 위한 각종 부대 시설이 빈약하여 研究 活動이 不振하다. 또한 연구 여건이 개선된다 하여도 대학의 학부 중심 운영 체제에 전환을 가져오지 않는 大學院教育和 研究 活動은 활성화되기 어렵다.

대학원 교육이 부실한 또 하나의 원인은 대학의 기능과 체제가 미분화된 데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설립 목적과 地理的 興件 등과 상관없이 거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대학원 체제도 대학과 함께 未分化된 상태에서 대학원의 機能과 役割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정된 教育 資源의 효율적인 활용을 阻害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興件 不備와 大學 機能 및 體制의 未分化로 우리 대학들은 학문적 이론과 기술의 축적이 없이 외국의 선진 이론 및 기술을 도입하는 데 급급해 왔다. 그러나 우리 經濟社會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고도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발전함에 있어서 기초 이론의 창조적 개발,

기술 개선의 선도, 고급 인력의 자력 생산 등의 기능을 대학에 추가하지 않고서는 국가 발전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時代的 要請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대학의 수월성을 제고시키는 일이 바람직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인적·물적 자원의 제한과 當面 高級頭腦의 수요를 감안할 때, 우선 소수의 대학으로 하여금 學問研究機能과 大學院教育에 역점을 두게 하여 고급 두뇌의 양성과 국내 학술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도록, 즉 大學院中心大學을 육성하는 것이 보다 效率的인 방안이 될 것이다.

大學院中心大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대학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大學 運營體制를 개편해야 하며, 제반 教育 및 研究 興件을 최대한 확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첫째, 大學院中心大學은 교육 기능보다도 연구 기능에 중점을 두어 창조적 학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선진국에 대한 학문적 의존성을 극복하는 동시에 국내 대학의 학술 활동을 선도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하며, 이러한 기능을 통하여 국내에서 소모되는 고급 두뇌 인력을 양성·공급해야 한다.

둘째, 大學院中心大學은 학부 학생보다는 대학원 학생 수가 더 많도록 조성되어야 하며, 教授의 대폭적인 증원을 통하여 教授對 學生數의 비율이 1대 10 이하의 수준이 되도록 감축해야 한다. 또한 大學 組織을 대학원 중심으로 재편성하고 研究機能에 주력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교육과정면에서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학부 과정의 전공 영역을 統合·廣域化해야 한다.

셋째, 大學院中心大學의 육성은 많은 재정이 소요되므로 현재 여건이 갖추어진 대학을 우선 선정하되, 개별 대학 전체를 大學院中心大學으로 선정하거나 개별 대학(교)내의 단과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학원 중심 대학은 學術研究와 大學教育을 선도하는 대학이므로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分散·選定해야 한다. 대학원 중심 대학을 타 대학과 구분하기 위하여 시

설, 교직원 확보 기준과 지원 기준을 달리 책정하여 적용하고, 학사 운영과 인사 등에 있어서도 客觀性과 嚴正性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大學院中心大學에서는 대학원 과정이 강조되고 학사 운영이 대학원 중심이므로 학사 과정의 위치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사 과정은 대학원 교육을 위한 豫備教育 성격을 강조하고, 교육과정을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大學院中心大學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교수 개인별 실적 위주의 지원을 병행하고, 大學院中心大學으로 된 시설의 공동 활용과 교수간 교류 및 공동 연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4. 大學評價認定制度的 實施

大學評價認定은 대학이 교육·연구·봉사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학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개별 대학간의 선의의 경쟁을 助長하고, 대학을 育成·支援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一般社會와 大卒 需要者에게 대졸 학력을 보장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부터 대학교육협의회에서 大學教育과 大學行政의 발전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대학의 學事 및 運營 전반을 평가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대학 평가 사업은 大學評價認定制度的 본래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大學評價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評價計劃이 단기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평가 목적의 불명료성으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合意點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大學評價의 목적이 대학교육의 질 향상에 있다면 그 결과가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나 문교부 당국의 결과 활용에 대한 의지 미약과 개별 대학 경영자의 인식 부족으로 그 결과가 死藏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학 평가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기구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大學評價는 대학 전체의 발전에 關鍵이 되므로 고도의 전문적인 기구와 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행 大學評價制度的 결함과 문제점을 발전·보완시킴으로써 이를 명실상부한 大學評價認定制度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학위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대학의 자치 능력을 향상시켜 대학 행정과 학사 운영의 自律性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大學評價認定制度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제도의 목적을 정립하고,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첫째, 大學評價認定制度는 정부 주도적인 대학 행정에서 벗어나 대학간의 자율 협의 기구가 중심이 되어 운영한다. 이 제도는 대학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위 과정의 공인 여부를 결정하고 대학 운영의 充實度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학별 정원의 책정과 대학의 재정 지원 등을 자율적으로 통제·조정해야 한다.

둘째, 현행 대학 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대학 평가 인정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제 1 단계에서는 대학 평가를 위한 사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研究·開發에 주력하고, 제 2 단계에서는 大學評價認定制度的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제 3 단계에서는 週期的·自律的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 정책과 행정에 활용해야 한다.

셋째, 大學評價認定制度的 실시를 위하여 전국 단위의 大學自律協議機構에 상설 대학 평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개별 대학에 자체 평가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전국 단위의 大學評價委員會 산하에는 전공 영역별, 지역별 또는 대학의 유형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대학의 자체 평가 위원회에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또한 전국 단위의 대학 평가 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관련 부처, 민간 단체 등을 대표하는 각계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네째, 大學評價認定制度를 합리적으로 운영하

기 위하여 평가 인정은 대학이 설립된 후 5년이 경과한 후부터 평가를 실시하되, 기관 평가를 실시한 후에 학과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大學評價認定의 유효 기간을 설정하여 적용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有效 期間에 차등을 둔다. 또한 대학의 성격과 유형 그리고 학과별 特殊性 등을 고려하여 평가 영역과 평가 준거 및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간의 심한 질적 격차가 있는 상태에서 大學評價認定制度를 실시할 경우, 질적 수준이 미흡한 대학의 참여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대학에 대한 참여 유인책을 강구하기 위한 별도의 경과 조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大學評價 結果를 공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 일부 대학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대학 평가 인정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홍보를 강화하여 大學評價認定制度 실시에 대한 전체 대학인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대학 평가 위원이 일체 외부의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신분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위원 선정을 신중하게 하고 위원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5. 大學定員 策定の 自律化

우리나라 대학 정원은 대학이 自律的으로 策定·管理하는 것이 아니라 政府에서 획일적으로 책정하되 개별 대학은 정원을 정부에 신청하여 배정을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大學定員 策定을 대학에 맡겨 두는 추세에 비추어 보거나, 대학이 스스로 質 管理를 강화하고 대학의 특성에 맞도록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보면 현행 우리나라 대학의 정부에 의한 정원 책정 및 관리 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대학교육에 있어 자율화는 그 정도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통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지만, 특히 질적 수준의 향상을 전제로 하여 대학의 학생 정원이 自律的인 협의의 기구를 통하여 상호 조정·통제하는 가운데 대학간의 자유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大學教育의 질적

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원 책정의 자율화로 부실한 대학이 이득을 볼 수도 있으며 과거 私學의 企業化라 비난 받던 非理를 다시 불러 일으킬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定員 策定과 대학의 질 관리에 관련된 準據와 基準을 설정하여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勞働市場과 大學의 연계 체제 위에서 自由市場原理에 입각하여 대학 정원이 자율적으로 조정되도록 해야 하되,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당분간 정부가 전체 정원을 책정하고, 大學評價認定制度의 정착화 정도에 따라 점차 정원 책정을 自律化해야 한다.

첫째, 高等教育 人口의 지나친 팽창을 막고 大學教育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체 정원 규모는 당분간 정부가 책정하되 大學評價認定制度의 발전 정도에 따라 계열, 학과별 정원 책정을 단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둘째, 대학 평가 인정 제도가 정착되기 전이라도 정부는 分野別 또는 系列別 定員만을 책정해 주고 각 학과별 정원의 책정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세째, 대학 평가 인정 제도가 정착된 후에는 대학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평가 기능을 갖는 대학간 자율 협의 기구에서 개별 대학의 계열별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 평가 인정 제도의 실시로 대학의 自治·自律能力이 확보되고 제반 社會的 與件이 성숙될 때 定員 策定은 개별 대학의 自律에 맡겨야 한다.

大學定員 策定이 자율에 맡겨져서 국가 전략상 필요한 인력을 養成·供給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政府가 국·공립대학에 정원을 배정하여 인력을 양성·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私立大學에서 國家戰略上 필요한 분야에 정원을 책정하여 인력을 양성·공급할 경우 정부가 필요한 財政 支援을 해 주도록 한다.

또한 大學評價認定制度의 定着化 정도에 따라 정원 책정을 자율화할 경우 인정 제도를 악용하여 과도한 증원으로 企業化와 같은 부조리를 저지를 대학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大學評價認定制度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철저히

계 定員 策定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6. 教授當 學生數 15명선으로 減縮

教授의 授業負擔 過重은 교수의 중요한 業務 中 하나인 研究 活動을 침체시키게 된다. 이것은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위한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데도 기인하겠지만 학생 수의 증가로 인한 授業과 學生指導 負擔에 크게 기인되고 있다. 대학 교수의 수업 부담을 학부 강의 시간만으로 계산하면 60%의 교수가 주당 법정 수업 시간 수인 9 시간 이상의 授業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12 시간 이상의 授業을 負擔하는 교수도 전체 교수의 약 40%나 된다. 여기에 대학원의 수업과 대학원생의 論文指導 시간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대학 교수의 수업 부담이 과중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수의 수업 부담 과중은 개별 지도, 소집단 수업뿐만 아니라 과제물의 부여와 검토 등이 불가능하여 대학의 수업과는 거리가 먼 수업을 실시하고 있어 실제 大學敎育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교수와 학생간의 인간적인 만남과 학문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육적 상황이 단연되고 있다.

밀도 있는 강의와 충실한 학생 지도를 통해 大學敎育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教授의 學術研究 活動과 대내·외 봉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수 대 학생 수 비율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첫째, 大學敎育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2000년대초까지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15명선 이하가 되도록 감축해야 한다. 교수 대 학생 수 비율을 極小化시키되 전공 영역과 학문 분야의 성격에 따라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 예컨대 인문·사회 계열에 비하여 자연 계열의 교수 대 학생 수 비율이 낮도록 調整해야 한다.

둘째, 學部 講義 이외에 대학원 강의 시간과 대학원생의 논문 지도 시간 등을 정규 수업 시간으로 간주하여 專任教授의 실제 주당 수업 시간이 9 시간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규모 수업에서 오는 교수 부담을 경감하고 密度 있는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학부의 전공 분야의 학급 규모는 30명 이

내의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때에는 分班講座制度를 도입하여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교수당 학생 수를 15명선으로 감축할 경우 엄청난 수의 新規 教授要員이 소요될 것이므로 교수 요원 양성을 위한 국내 대학원의 질 향상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교수 요원을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성된 教授要員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국·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의 財政 確保를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7. 大學의 研究 支援體制 強化

대학이 수행해야 할 본질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研究機能이다. 대학은 연구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知識과 技術을 창출해야 한다. 대학의 연구 기능이 부진할 때 그 대학은 존립 가치와 생명력을 잃어 버리게 된다.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나라 대학은 研究 興件이 미흡하고 研究 活動이 침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專任教授 確保의 부진으로 교수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강의에 빼앗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를 위한 계반 시설이 부족하고 財政 支援이 미흡하다. 최근에 이르러 研究·開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적인 차원의 研究·開發 投資가 증대되고 있으나 GNP 대비 연구 개발비 투자 비율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의 부진으로 대학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의 研究開發費는 다양한 財源에서 나올 수 있지만 社會機關이나 産業體 등에서 제공하는 연구비는 일시적이고 간헐적일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영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에 크게 의존할 수는 없다. 또한 제정 형편이 빈약한 대학이 자체내 예산 중의 많은 부분을 研究費로 할애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研究開發費 支援은 政府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대학에 제공하는 연구비는 學術研究助成費와 大學附設研究所의 支援, 그리고 각종 政策課題를 위탁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연구 지원들도 한정된 財源으로 인하여 연구 과제당 연구비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여 결국 실질적인 연구 수행에는 별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學術研究助成費는 정부가 대학에 제공하는 연구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대학내 연구 활동에 기여하고 있지만 그 지급 건수나 지급 액수는 미약한 수준이다. 따라서 학문과 지식·기술의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大學의 研究機能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大學의 연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研究·開發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해야 한다.

첫째, 大學의 연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大學附設研究所 運營을 내실화해야 한다. 모든 대학들이 부분별하게 설치·운영해 온 大學附設研究所 중 유명무실한 연구소는 자율적으로 정비하고, 우수한 연구소를 선별적으로 집중 支援·育成해야 한다. 大學附設研究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연구소 단위로 연구비를 執行·管理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내 부설 특수법인연구소의 설립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부설 연구소에는 연구 전담 교수를 둘 수 있도록 정원을 배정하고, 박사후 과정 연구제를 도입·환용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학의 연구 활동을 위한 財政 支援을 대폭적으로 擴大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문교부의 학술 연구 조성비 지원 규모와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를 위한 과학기술처의 연구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의 研究 投資를 유치하기 위하여 연구 활동에 대한 寄附金에 세제상 전액 손비 처리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고가의 투자를 요하는 研究 器械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아울러 維持管理費와 減價償却費 등을 매년 계상하여 지원해야 한다.

셋째, 大學에서의 研究 活動이 대학원 수준에서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대학의 施設 基準을 개정하여 대학원생에게 연구실을 배정하고, 이들을 위한 연구용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研究 支援體制를 갖추기 위하여 연구 기기를 관리·유지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할 技能員을 별

도 정원으로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의 研究機能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人的·物的 資源을 확보하고 연구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막대한 재정 소모가 예상되므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연구·개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大學附設研究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專任研究員이 확보되어야 하나 대학의 풍토상 이들이 연구소에만 있을 경우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게 教授 採用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학과 소속 교수와 교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地域 研究 및 地域 研究 專門家 養成機能 強化

開放·國際化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국제 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국의 발전 없이는 대등한 위치에서 국가간의 상호 의존과 협력·교류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없으므로 자국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國際競爭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經濟的 側面에서 국제 용자나 투자, 기술 이전 등 새로운 형태의 交易이 생겨나고 증가하게 되고, 이데올로기보다는 국가 이익이 우선되고, 政治보다는 經濟에 의한 결속이 앞서게 되는 등 複雜한 相互依存性이 고조될 것이다.

경제면에서뿐만 아니라 기타 社會·文化·學術의 側面에까지 國家間 競爭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技術 開發을 위한 投資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응용 연구 부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초 연구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大學의 研究 活動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社會의 開放과 國際化 추세에 따른 주체성 상실의 위험은 일반인의 價値觀이나 生活樣式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개방화가 추진되면서 외국에 대하여 우리 문화를 알리게 됨과 동시에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활발해진

다. 그리하여 거의 두제한적으로 전과되어 오는 外來文化는 우리의 傳統的인 生活樣式이나 價値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外來文化와 우리의 傳統文化간에 調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文化간에 葛藤을 일으키거나 나아가서는 외래 문화가 우리의 정체성을 침식하게 될 때에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와 국제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해서는 물론 國際競爭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타 국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러한 타 국가나 타 지역에 대한 연구는 政治·經濟·社會·文化 등 여러 영역에 있어서 국제 관계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심층적인 地域 研究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며, 專門研究機關을 설립하거나 기존 연구 기관에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첫째, 地域 研究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地域 研究 專門家を 양성해야 한다. 지역 연구 전문가는 현행 대학원의 정규 학위 과정에 이러한 전공 분야를 新設하여 양성하거나 단기 연수 과정을 통하여 양성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 진출하여 地域關係 業務에 종사할 地域 專門家を 양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國際 交流와 交易을 확대하기 위하여 저개발국의 지도급 인사에게 한국의 문화와 개발 경험 등을 확산시켜야 한다.

둘째, 地域 研究를 위한 전문연구소를 운영해야 한다. 지역 연구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지역 연구와 國際政策開發을 담당할 특수 법인의 國際·地域關係 研究所를 설립하고,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 연구 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蒐集·分析하고, 기존의 정부 출연 연구 기관에 지역 연구 부서를 확충하여 國際·地域關係 研究所와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지역 연구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향후 開放·國際化 社會에서 요구되는 地域 研究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구 기반 조성 및 외국의 정보·자료 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각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국제 관계 업무를 통하여 情報·資料 입수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국제·지역 관계 연구소의 설립은 물론 專門家의 養成과 정보·자료의 입수 등은 많은 추가적인 財政이 소요되므로 地域 研究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분야에 특별한 投資와 支援이 있어야 한다. *